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5월 3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30일(수) 11:3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5. 29.(화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
담당과장	이경호 과장(044-203-5360) 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 최진혁 과장(044-203-5390)	담 당 자	오종희 서기관(044-203-5361) 정대환 사무관(044-203-5372) 김미연 사무관(044-203-4769)

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·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

- 재생에너지 보급, 이상무! 산지훼손, 부동산투기는 그만!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5. 30.(수)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**「재생에너지 민·관 공동 협의회」**를 개최했다.

* 재생에너지 민·관 공동협의회 : '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'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계획 추진과정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·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(3.22)

○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, 지자체, 유관기관,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**「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」**을 **점검**하고,

○ **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**를 위해 태양광·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, 입지갈등, 부동산 투기, 소비자 피해 등 **부작용 해소 대책**을 발표했다.

□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(5.24일 기준)은 **태양광·풍력 중심의** 보급확대에 힘입어, 전년 동기대비 **약 2배 증가한 1.43GW**로 올해 보급목표 1.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.

□ 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」 발표('17.12) 이후, 재생에너지에 대한 **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**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, 당초 발표한 **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**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○ (**국민참여형 발전사업**)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였고, 전국적으로 **100여개 협동조합과 1,865호**(약358MW)**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.**

* 주택지원사업中 단독주택 신청건수 : ('17) 6,648건→ ('18.5)11,881건(78.7%↑)
*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참여자가 금년 상반기 전년 대비 3배 증가

○ (**대규모 프로젝트**) 134개 24.9GW 태양광·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이며, 올해 군산 비응도의 18.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예정이다.

○ (**주민수용성**)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(주민 지분참여 20%) 등 5개 **발전사가 11건의** 재생에너지 사업(1,617MW)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**사업을 추진한다.**

○ (**제도개선**) 규제혁신토론회('18.1)에서 발굴한 **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 완료**, 1건을 부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.

* (완료)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, 농지보전부담금 감면, 농업진흥구역內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, (부분완료)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

* 지난 5.18일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태양광·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키 위한 REC 가중치 조정(안) 발표

□ 다만,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△**산지 등 환경훼손,** △**입지갈등**, △**부동산 투기,** △**소비자 피해** 등의 부작용이 발생, **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**을 위해 **부작용 해소 대책**도 함께 논의했다.

○ (**산지훼손 방지**) △태양광 **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*** **도입**, △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(**REC**) **가중치 축소**(0.7) 등 **산지 훼손 최소화**

* 지목 변경(임야→잡종지) 없이 일시(태양광 수명기간 20년)사용후 산림 원상복구

○ (**입지갈등 해소**) 태양광·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△주민에게 **사업내용을 사전 고지**하고 △**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**

○ (**부동산투기 방지**) △태양광 **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** 도입을 검토하고, △준공전 **발전사업허가권 양도·양수 제한,** △**임의분할** (쪼개기) **방지제도 강화**

○ (**소비자 피해 방지**) △**통합 전화상담실(콜센터)을 개설**(☎1855-3020)하고, △**소비자 피해 사례집** 발간 및 **태양광 시공 정보** 제공

○ (**지원시스템 확충**) △에너지공단 **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** 역할 강화 및 △**지자체 인력확충**, 재생에너지 **사업관리 지원시스템** 구축

□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국민이 지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**부작용 해소대책에 공감**하는 한편, 3020 이행계획의 **가시적 성과창출**을 위해 노력할 것들 다짐함

○ 발전공기업은 **대규모 프로젝트 실행**주체로서 **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**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**'지역현장'을 지원**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**현장애로를 적기 해소하기로 함**

○ 중앙부처는 **제도개선 과제**를 조속히 마무리하고, 산업부도 인허가, **계통연계**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**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(FIT)**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.

□ 이날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**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**할 것을 당부하고,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**부작용도 해소**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.

○ 또한, "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 **재생에너지 3020 보급 목표 달성**을 위해 **개선이 필요한 사항**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**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** 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붙임1: 재생에너지 민·관 공동협의회 개최 개요
붙임2: 재생에너지 3020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
붙임3: 태양광·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오종희 서기관(☎ 044-203-5361) 또는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정대환 사무관(☎ 044-203-5372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재생에너지 3020 민·관 공동 협의회 개최 개요

※ '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'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계획 추진 과정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·관 공동 협의회를 구성(3.22)

□ 추진배경

○ **'태양광·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'**을 발표하고, 기관별 **3020 이행실적 점검** 및 효과적인 이행 협력방안 등 논의

□ 일시 및 장소 : 5.30(수) 11:30~13:00, 산업부 대회의실(506호)

□ 참석자 : 30명 내외

○ **(산 업 부)** 산업부 장관, 에너지자원실장,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

○ **(관계부처)** 국조실, 농식품부, 환경부, 국토부, 산림청, 새만금청 등

○ **(지방정부)** 경기도, 충북도, 강원도, 전남도, 경북도

○ **(유관기관)** 한전, 한수원 등 발전6사, 한국에너지공단

○ **(민간기관)** 한화큐셀(신재생협회 부회장사), 두산중공업(풍력협회 부회장사),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, 환경운동연합

□ 세부계획 (안)

시간		주요내용	비고
11:30~11:35	5'	▪ 모두 말씀	장관님
11:35~11:45	10'	▪ 산업부 안건 발표 - 3020 이행실적, 부작용 해소방안	신재생국장
11:45~12:55	70'	▪ 부처·기관별 발언 및 토의 - 기관별 추진실적 및 건의사항 등	장관님 주재
12:55~13:00	5'	▪ 마무리 말씀	장관님

※ 모두 말씀까지 기자단 공개

붙임2 **재생에너지 3020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**

1. 보급현황

□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(에너지 전환, 재생에너지 3020)으로, 現정부 출범('17.5) 이후 **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 중**

○ '18.5.24 기준, 금년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(1.4GW)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이며, 올해 신규설비 보급 목표('18년, 1.7GW)의 84.1% 달성

<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현황 >

구분	2014	2015	2016	2017			2018.5.24
				총계	상반기	하반기	
재생에너지(MW)	1,886	1,482	1,445	1,899	808	1,091	1,430
- 태양광	926	1,134	909	1,211	547	664	665
- 풍력	61	208	187	130	45	85	72

□ 보급 증대와 함께 다양한 민간의 **비즈니스 협력모델 창출 중**

○ △**기업 유휴부지 활용 모델**(기업內 주차장), △**동반성장 모델**(영암 태양광-지역업체 조달), △**주민참여형 모델**(철원군 주민 태양광 지분투자)

2. 정책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

◇ **지속가능**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**속도감** 있는 추진 및 **가시적 성과 창출**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,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

대규모 프로젝트 추진

□ **(현황)** 발전6사 등 **17개사 134개 24.9GW 규모 프로젝트**(태양광 74개 13.3GW, 풍력 60개 사업 11.6GW)를 발굴, 체계적으로 관리 중

□ **(계획)** 세계 최대 규모의 **GW급 플래그십 프로젝트**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모멘텀 확보

○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, 비전선포식, MOU 체결식, 준공 또는 착공 계기 홍보

< 대규모 태양광·풍력 프로젝트 추진현황 >

구 분		용량 (MW)	프로젝트 (개수)	사업비 (억원)
태양광	육 상	9,487	40	150,507
	수 상	3,861	34	106,545
	소 계	**13,348**	**74**	**257,052**
풍 력	육 상	1,881	32	53,003
	해 상	9,699	28	496,432
	소 계	**11,580**	**60**	**549,435**
합 계		**24,928**	**134**	**806,487**

국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

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

□ **(현황)** 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**자가용 수요 급증***, 보급사업의 활성화 위한 **여건 개선****으로 대여·보급 사업 확대

* 주택지원사업中 단독주택 신청건수 : ('17) 6,648 → ('18.5) **11,881건** (78.7%↑)

** 태양광설비 조달구매.총사업비 상한제 도입, 시공기업의 서비스등급 공개(S~D)

□ **(계획)** 금년 **주택 7만호 달성**을 목표로 **보급·대여사업 지원, A/S 전담업체 관리권역 세분화, 통합모니터링*** 등 설비 유지보수 강화

* 보급사업으로 구축된 신재생설비의 발전량, 효율, 장애 등을 실시간 관리

② 소규모 사업 지원

□ **(현황) 소규모 사업 보급 확대***, 전국적으로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25개를 포함하여 100여개의 협동조합이 발전사업 중심으로 활동 중

* '18.上 100kW 이하 고정가격매입제도 입찰실적은 2,245건(전년비 3배 증가)

□ **(계획) 소규모 사업** 수익 안정화 및 리스크 완화 위한 **전용 보험상품 출시**(6월), **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**(FIT) 도입(6월)

③ 농가 태양광 활성화

□ **(현황) 농촌태양광 사업**에 **358MW**(1,865호, '18.4) 참여 중이며, **영농형 태양광은 수요조사**(63MW, 640호) 후 농지 일시사용 협의(농식품부) 중

* 농촌태양광 사업신청 확대 : ('17) 322건 → ('18) 1,069건

□ **(계획)**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대상 확정 후 **11월중 착공식 개최, 염해피해간척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**을 위한 농지법령 개정('18.하)

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

① 제도 및 규제 개선

□ **(핵심규제 개선)** 규제혁신토론회('18.1)에서 발굴한 **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 완료**, 1건 부분완료, 나머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중

*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, 농지보전부담금 감면,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, 자가용 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등

□ **(REC 가중치 조정)** 공청회(5.18) 의견 검토 후 6월중 RPS 고시 개정

○ 경제성外 **환경성·수용성 고려** 강화, 태양광·풍력 등 **청정에너지 확대** 유도, 폐기물·우드펠릿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 최소화

* 해상풍력·미이용 바이오 가중치 상향, 바이오·폐기물·임야태양광 가중치 하향

② 주민수용성 제고

□ **(현황)** 수용성 제고를 위해 **발전사를 중심**으로 태양광 사업이 주민 수익이 되는 **주민참여형 사업**(5개 발전사 11건 1617.6MW)**을 추진 중**

□ **(계획)**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**REC 가중치 우대**, 주민 지분참여에서 채권·펀드 형태로 **주민 참여방식 다양화**(6월)

③ 유휴부지 활용

□ **(현황)** 산단공·에공단 협업 **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지붕을 활용**한 태양광사업 추진, 우선 2개 지역 대상(0.7GW) 시범단지 방식으로 추진

○ 전국 **초·중·고 옥상을 임대**하여 **태양광** 발전 추진中(195개교, 13.6MW)

□ **(계획) 전국 산업단지 대상 태양광사업 확대방안** 마련·추진

*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잠재량은 서울 디지털산단 등 45개소 약 3.2GW 규모

○ 전국 초·중·고 대상 태양광 사업에서 **대학까지 태양광 확대** 추진

* 대학과의 협력 채널 구축하고, 대학내 부지발굴 및 연내 시범사업 추진(12월)

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

□ **(R&D)** 태양광 12개, 풍력 8개 등 **'18년 R&D 신규과제(450억원) 선정**('18.5월)

* '18년 신규과제 공고('18.2), 과제접수 및 평가('18.5), 과제협약('18.6)

○ **(단기)** 태양광 모듈출력 저하율 개선기술('18~), 7MW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('18~) 등 **단가저감형·기술추격형 R&D**에 집중

○ **(중장기)**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개발('18~), Post-실리콘 상용화 R&D,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기술 개발('18~) 등 **차세대 기술개발 추진**

□ **(실증)** 도입 잠재력이 높은 **건물벽면, 농지, 도로면**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기술 실증,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**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추진**

□ **(클러스터)**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특별법 시행령·규칙 제정('18.6)으로 **법적 기반을 마련**하고 **기업들과 인프라가 집적된 클러스터** 지정('19.3)

* 융복합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, 전문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재정지원

□ **(해외진출)** 베트남, UAE 등 기존 **네트워크를 적극 활용**하고, **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**('18.6~)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

* (베트남) 양국 협회간 연2회 정기교류 실시(`18.5.11, 호치민),
(UAE)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(`18.6월, 한국)

3. 이행 협력체계 구축

□ **(총괄) 재생에너지 민·관 공동협의회**를 분기별 운영하여 종합 실적점검

□ **(분과별)**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과 월단위 이행협력 회의 개최, 협력사항 논의

* 관계부처 협의회, 광역지자체 협의회, 유관기관 이행협력 협의회

□ **(이슈별 T/F)**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점검회의, 계통문제 해소T/F 등 **이슈별 T/F를 구성**하여 대응방안을 **주기적으로 논의**

붙임3 **태양광·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**

1. 추진 배경

□ 現 정부 출범('17.5) 및 재생에너지 3020 발표('17.12) 이후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 **부작용*이 언론에서 이슈화**

* 산지 등 환경훼손, 입지 갈등, 부동산 투기, 소비자 피해 등

⇨ 따라서, **태양광·풍력 부작용**의 現 **실태를 파악**하고 **해소 대책** 마련

2. 부작용 해소 대책

◇ **산지 태양광, 인허가, 부동산 투기** 등 **관련 제도를 개편**하고 **지원 시스템을 확충**하여 태양광·풍력 확대에 따른 **부작용 해소**

산지 등 환경 훼손 방지

□ **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및 허가기준 강화 등**

○ 태양광 설치 시, 지목 변경(임야→ 잡종지)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**산지일시사용제도**로 전환

○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로 전환하면서 **대체산림자원조성비**도 부과 (보전 5,820원/㎡, 준보전 4,480원/㎡)

- (현재) 100% 감면(보전·준보전)→ (변경) 보전 0% , 준보전 50% 감면

○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**경사도 허가기준** 강화(25도→15도)

□ **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허가 기준 일시 강화**

○ 산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*을 엄격하게 적용

*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[별표1의2]

□ **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축소**

○ 태양광을 '임야'에 설치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축소

* (현행) 용량별 가중치 1.2/1.0/0.7 → (개선) '임야'는 발전용량 관계없이 가중치 0.7

입지갈등 해소

□ **발전사업허가 前 주민에게 사업내용 사전 고지**

○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허가신청 前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

□ **태양광·풍력 발전사업허가 前 환경영향평가(소규모 포함)를 실시하여 환경성 검토**

○ 사업자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 후 발전사업허가가 나도록 허가 前 환경영향평가(소규모 포함) 실시

부동산 투기 방지

□ **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검토**

○ 태양광 설치 시, 지목 변경(농지→ 잡종지)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*

* 일시사용허가제도 적용 시, 부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억제

□ **태양광 준공 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·양수 제한**

○ 발전사업허가권 및 설비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준공 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 양도·양수 제한

- RPS 설비 확인(사용전 검사 직후 준공 직전 실시) 이전에는 발전사업 허가권의 양도·양수를 인가하지 않도록 개선

□ **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**(쪼개기) **방지 제도 강화·운영**

○ **동일사업자의 범위를 확대**하고 **명의 도용시 제재 강화**

- **동일사업자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**하여, **가족**이 인접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現 **동일사업자에 준하는 REC 부여**

소비자 피해 방지 등 지원 시스템 확충

□ **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가 정보 제공**

○ 소비자 피해 유형별 FAQ 정보 등을 포함한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 정보를 유관기관(에공단, 한전) 홈페이지에 등록

□ **태양광 분양피해 상담 등을 위한 통합 콜센터**(☎1855-3020) **개설**

○ 태양광 관련 피해 신고 처리(최초 접수 → 피해사실* 확인 → 대처방법 상담), 투자 상담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콜센터 개설

* 허위·과장 광고 여부, 시공·제품 하자 여부, 인허가 가능 여부,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

□ **에너지공단 지역본부**內 재생에너지 **종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**하여 **지역 보급의 거점**으로 활용

○ 발전사업 안내, 정부 보조금 사업 등 **발전사업 전반**에 대한 **컨설팅, 전력계통 안내** 등을 포함한 **원스톱 서비스** 지원

□ **지자체 인력 확충 추진 및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**

○ 재생에너지 지자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, 사업 통합 관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(에너지공단內)하여 지자체와 연계·운영

3. 이행점검 체계

□ **「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사회적 갈등 해소 TF」**(팀장 : 에너지자원실장)를 설치('18.5)해서 대책 이행 점검

* 매달 **「산업부-광역지자체 협의회」**도 별도로 개최